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04(금) ~ 2022.11.10(목)

제공일시 2022 11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04(금) ~ 2022.11.10(목)

제공일시 2022 11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전자상거래에서 포장폐기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 마련

- EU에서 리파워EU법안과 그린딜, 순환경제액션플랜 등 2019년, 2020년 발표했던 엄브렐라 법안의 하위법령들이 2022년 하반기에 쏟아지듯 나오고 있음
- EU 에너지효율지침(EED) 개정안도 지난 10월 중순에 나왔고, 4일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다고 함
- 11월 30일까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개정'을 진행한다고 함 규제 초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포장 최소화, 폴리스틸렌, 에어쿠션, 종이, 버블랩 등으로 채워지는 빈공간을 줄이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는 빈공간 비율이 최대 40%임을 확인해야 함
- 또 2030년까지 전자상거래에서 재사용 패키징 20%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80%를 목표로 하고 있음

(Euractiv, 2022.11.04) Freideric Simon 기자

2. EU, 내년 5월 디지털시장법 적용... 빅테크규제 강화

-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음
- EU는 1일(현지시간) 주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내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신의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핵심 골자임

(동아일보, 2022.11.04) 전남현 기자

3. IRA에 이은 RMA...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 피해 없을까

- 유럽연합(EU)이 원자재법(RMA) 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유럽 수출량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RMA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및 유럽 역내 생산 강화를 골자로 함 대중 무역관계 악화 및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변수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RMA는 아직 법안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국 원자재 이용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시 국내 전기차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비해 RMA의 규제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함

(시사저널, 2022.11.07) 유주엽 기자

1. EU, 내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100GW로 2배 증가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COP27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내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 100GW 용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 이는 러시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EU가 제안한 3000억원 규모의 전략(리파워 EU) 일부인데, 태양광, 풍력, 녹색수소 등에 투자하는 것임
- 폰데어라이엔은 또 이집트, 나미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남아공 등 각국과 새로운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EU가 지원하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음
-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10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기금의 의무도 강조했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1000억달러 목표치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ESG Today, 2022.11.08) Mark Segal 기자

2. EU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규칙 채택

- 유럽의회가 525대 60의 표결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채택하여 2024년 초까지 실시될 EU 내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의 대폭적인 정비작업을 거의 마무리해나가고 있음
- CSRD가 2014년 NFRD(비재무보고지침)의 개정사항으로, 이전까지 1만2000개 기업이 보고했다면, 앞으로 5만개 이상의 기업이 ESG에 관한 기업의 영향 및 리스크를 보다 상세히 보고해야 함
- EU의회와 이사회는 최근 합의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정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음 즉, 기업 자율보고로 놔두지 않겠다는 것임
- 현재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공동 프레임워크(ESRS)를 개발중인데, 지난 5월에 발표한 초안이 아니라 이달 안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ESG Today, 2022.11.10) Mark Segal 기자

3. WTO 사무총장, 녹색 무역협상 부활 계획 밝혀

- WTO 사무총장이 COP27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무역 협정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음
- 이는 태양광 패널, 스마트 난방제어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무역장벽을 폐기하겠다는 논의임
- WTO의 글로벌 환경무역협상은 2016년 어떤 제품이 환경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국과 서방국 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결렬된 바 있음
- 하지만 WTO 사무총장은 1)COP27 기후회담과 별도로 환경관련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2)서비스에는 대기오염 완화나 폐수 처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음

(Reuters, 2022.11.09) Simon Jessop 기자

(Reuters, 2022.06.17) Emma Farge,
Philip Blenkinsop 기자

1. 스마트그리드 진출 유망국은... “베트남·인도·인도·필리핀”

- 스마트그리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국가는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필리핀 등 4개국이라는 조언이 나왔음
-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는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는 지난해 360억달러에서 연평균 18.2%씩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600억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며 국내 스마트그리드 기업의 진출 유망 국가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4개국을 선정했음
- 또,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AMI),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및 전력저장시스템(ESS)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음

(뉴스스, 2022.11.07) 박정규 기자

2. 애플, 소니 등 글로벌 제조사, ‘탈(脫)플라스틱’ 선언

- 소니가 ‘탈(脫)탈플라스틱’을 선언, 내년부터 제품 포장재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일본 대기업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첫 사례가 됨
-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 오디오 등 1킬로그램(kg) 이하 소형 정보통신기기(ICT)에 적용. 플라스틱은 종이와 대나무 등으로 만든 신소재로 대체할 방침이며 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기기를 시작으로 TV 등 대형가전까지 확대할 계획임
- EU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포장재에 재생원료를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어서 규제가 강해지고 있음
- 애플은 주요 상품 포장재에서 플라스틱 비중을 4%까지 줄였고, 2025년까지 모든 상품포장재에서 플라스틱을 퇴출할 방침이며 이케아는 2025년까지 신상품 대상 플라스틱 포장 중지, 2028년까지 기존 상품에도 논플라스틱을 적용함

(전자신문, 2022.11.08) 윤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2022.11.08) 윤상호 기자

3. UN, 말로만 ‘넷 제로’ 약속기업 가려낸다

- UN(유엔)은 8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서 ‘기업 및 비국가 기관의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음
- 전 캐나다 환경부 장관인 캐서린 맥케나가 이끄는 17명의 유엔 전문가 그룹이 이해관계자와 관찰자들이 순 탄소배출량 제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기업 및 기타 비국가 기관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발표한 것임
- 이 지침은 기업이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룸
- 구체적으로는 회사 및 기타 비국가 행위자는 공급망을 포함한 전체 운영에서 자체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특정 종류의 탄소배출권을 사용해서는 안 됨 또, 정부의 야심찬 기후 정책을 훼손하기 위해 로비를 해서도 안 됨

(글로벌이코노믹, 2022.11.09) 김세연 기자

(뉴스1, 2022.11.09) 김민석 기자

1. 재계, 잇따라 이사회 평가 지표 도입하는 이유는

- 삼성전자가 3일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허은영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재계의 관심을 받았음
- 한중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이재용 회장의 취약한 내부 지분율(0.31%)을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임
- SK, LG전자, 금호석유화학, KT&G 등도 이사회 경영 강화 추진한다는 내용임 LG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나온 BSM은 12개 항목을 잣대로 이사회 구성원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성비율(14.3%)과 정책·행정(14%) 분야는 취약하지만, 독립성(57%)이 높고 경영·회계(57%), 연구·개발(43%), 법률(29%)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음
- BSM도입에 앞장선 기업들은 주로 2,3세 경영을 펼치는 곳으로, 금호석유화학은 8개 항목으로 BSM 도입사실을 공개했음

(한국일보, 2022.11.09) 박관규 기자

2. 애플, 1년 중 9개월 냉난방비 ‘제로’... 구글은 에너지 40% 자체생산/ 日도쿄, 2025년부터 신축 단독주택에도 태양광 의무화

-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사옥에서는 태양광, 풍력, 지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조절하고 물사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탈바꿈하고 있음
- 구글의 오피스 ‘베이뷰’는 5만개의 태양광패널이 설치돼 40% 에너지 자가발전, 100% 외부공기를 끌어오는 자연환기 시스템이 작동됨
- 이외에도 구글은 2000여개의 지열 파일도 넣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있으며,, 애플, MS, 아마존도 ‘제로 에너지 빌딩’에 도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도쿄도가 2025년부터 새로 짓는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되어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조선일보, 2022.11.09) 김성민 기자

(조선일보, 2022.11.09) 최은경 기자

3. 이통 3사 “하늘 길 선점하라”... ‘에어 택시’ 수주전 막 올랐다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
- 정부가 제시한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25년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위한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 이동통신 3사도 여러 분야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단계 실증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며, 양보 없는 경쟁 펼치고 있음

(세계일보, 2022.11.07) 이상규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1.04(금) ~ 2022.11.10(목)

제공일시 2022 11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유로 7 규칙, 2035년부터 신차량 배기관 탄소 배출 제어 의무화

(ft. 2022.11.11)

-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가 2035년 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 배기관의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유로 7 규칙(Euro 7 Standard)'을 발표함. 이 규칙은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도로 먼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차량의 브레이크,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축할 것을 규정함
- 이 규칙은 자동차, 밴, 버스, 화물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전기, 가솔린, 디젤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함. 유로 7은 규칙이 엄격해진 동시에 기존의 유럽 배출 규칙을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광범위한 오염 물질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에 대한 규칙을 정함
- 유럽위원회는 유로 7 규칙을 통해 "버스 및 트럭에서 56%, 자동차 및 밴에서 35%의 이산화질소를 줄이고자 한다"며 "브레이크 미세먼지와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배출량까지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최초의 규칙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차량 내부의 온보드(on-board) 센서를 통해 차량의 수명 주기 동안 배출량을 측정하고, 탄소 배출을 모니터링할 것임. 차량 제조업체들은 위원회가 배출량을 쉽게 제어하고 컴플라이언스 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동차 공급망 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배출을 제어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세먼지, 도로교통에 의한 질소산화물 노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유럽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유로 7 규칙의 주요 골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뉨
- 첫째, 브레이크, 타이어 등 차량에 내부에 있는 기존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질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함. 둘째, 포장도로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신규 차량에 유로 7 규칙을 적용함. 자동차와 밴의 경우,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와 관계 없이 최저 제한이 적용됨. 셋째, 신규 차량들은 수명 주기 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유럽위원회는 차량 내구성을 두 배로 높인 20만 km와 차량 유지 기간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차량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특히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재충전 빈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지속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 도로 교통은 유럽에서 대기 오염의 최대 주요 원인이었음. 2018년 유럽 내 질소산화물(NOx)의 39%, 미세한 입자 물질의 10% 이상이 도로 운송에서 나옴. 위원회는 2018년 EU-28에서 도로 수송으로 인해 약 7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고 추정함. 위원회의 제안이 채택되면, 2035년까지 자동차와 밴의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현재 대비 35%, 버스와 트럭의 총 배출량은 56% 낮출 것임
- 하지만 규칙이 발표된 이후, 찬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환경 단체들은 "유로 7 규칙은 유독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실패'가 될 것"이라고 비난함. 이에 대해 티에리 브르타뉴 EU 내부 시장 집행위원은 자동차 산업은 "탈탄소화를 위한 큰 변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개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함
- 자동차 제조사의 일부 임원들은 "이 규칙이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오히려 청정 차량 기술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밝힘. 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 겸 ACEA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는 "위원회의 제안은 환경 측면에서 이익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차량 비용만을 크게 증가시킬 뿐"이며 "실제 관련성이 거의 없는 극한 주행 조건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난함. 규정 준수 비용은 최대 150유로, 버스 또는 트럭의 경우 최대 2,600유로가 될 것으로 추산됨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됨. 미국 글로벌 도로 운송 기관 IRU는 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반면 본 규칙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자동차 산업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과 환경 이익 간에 균형을 적절히 이루지 못하면 넷제로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청정 차량 운영을 위한 제조사의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 규칙 범위에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포함되는 것도 주요 쟁점임. IRU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차량 부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요 부품과 타이어 및 파손과 같은 주변 부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밝힘
- 유럽자동차공업협회(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도 배기 가스 배출량이 이미 거의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유로 7 규칙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함. 협회는 “자동차와 밴에 대한 규정은 2025년 7월, 중형 차량은 2027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그 전까지 개발, 엔지니어링, 테스트 및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유로 7 규칙에 따라 여러 추가 테스트 목록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함. 이어 “대기 질과 CO2 배출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배출 차량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해야” 함을 강조함